

# ‘TK 통합신공항’, 주민투표로 군위·의성에 짓는다

공동후보지 점수 단독보다 앞서 의성 비안·군위 소보 접근성 우수 중·장거리 국제노선 활주로 건설 年 1000만명 수용하는 편의시설 도로 등 확충, 2026년 개항 목표



대구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함께 옮겨 건설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에 들어선다.

22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실시한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점수가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앞섰다.

공동후보지에 대한 의성군민 투표율은 88.69%·찬성률은 90.36%이고, 단독후보지에 대한 군위군민 투표율은 80.61%·찬성률은 76.27%를 기록했다.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합산한 점수는 공동후보지가 89.52로 단독후보지(78.44)보다 높게 나왔다.

### ◆의성 비안·군위 입지조건은

주민투표에서 선택을 받은 의성 비안·군위 소보는 항공기 이용객의 접근성 및 편리성이 뛰어난 지역이다. 확장성과 지역 공동 발전도 유리한 위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공동후보

지역은 기존 중앙고속도로 외에 상주-영덕 고속도로 및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충청, 강원 남부, 경기 남부에서도 접근이 용이하다.

대구시와 신도청 생활권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데다 구미산업단지의 물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곳이다.

공항 이용객의 최대 수요처인 대구권 역에서도 중앙고속도로와 상주-영천 고속도로를 통해 대구 어디서나 접근하기 쉽다.

중앙고속도로 금호분기점에서 가산 나들목까지 25km 구간 확장 계획 및 2021년 완공 예정인 대구4차 순환고속도로와의 연계를 감안하면 대구시의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공항보다 2배 이상 넓이

대구시는 통합신공항 이전지에 현재 대구공항보다 2배 이상 넓은 땅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항 건설 이후 항공 수요 변화에 따른 확장까지 고려했다.

이곳에는 유럽, 북미 등 중·장거리 국제노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길이 3.2km 이상 활주로를 건설한다.

시는 활주로 2개를 건설해 군 공항과

민간 공항으로 하나씩 사용하는 방안을 국방부·국토교통부와 협의한다.

또 다양한 국제노선을 개설하기 위해 충분한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여객터미널은 연간 1000만명 항공수요를 처리하는 규모로 지어 각종 스마트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갖춘다.

화물터미널은 항공 물류량을 고려해 건설하고, 여객터미널과 분리한다.

### ◆2026년 민간·군 공항 동시 개항 목표

대구시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6년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을 동시 개항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공항 청사진이 될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33억원을 배정해 공개입찰로 용역기관을 선정한다.

1년간 민간·군 공항시설 건설계획과 총사업비 산정, 이전지 및 소음 피해지역 주민 이주 대책을 수립한다. 이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시는 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 중·장거리

노선을 운영하는 통합신공항 위상이 반영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 ◆교통망 확충...공항 접근성 높인다

대구시는 도로, 철도 건설로 통합신공항과 대구·경북 주요 도시 간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구에서 신공항 이전지까지 자동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와 철도를 확충한다.

시는 대구 4차 순환도로 개통, 대구북구 조야동~경북 칠곡군 동명면 간 광역도로 건설, 중앙고속도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4차 순환도로는 내년에, 조야~동명 광역도로는 2024년 개통할 예정이다. 중앙고속도로 확장공사는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 동대구역 및 서대구고속철도역(내년 개통 예정)과 통합신공항을 잇는 철도망 구축을 추진한다.

그러나 김명만 군위군수가 개표 결과에 불복해 점수에서 뒤진 우보면 유치를 신청하겠다고 밝혀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추진 일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김홍기 기자 gj2136@metroseoul.co.kr

# “연휴에 초중고 374교에 무료 주차하세요” 박원순 “시민이 시장”... 신년 업무 첫 공개

### 서울시교육청 운동장·주차장 개방

서울시교육청은 설 연휴인 24일~27일까지 4일간 서울 시민과 역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서울시내 초중고 374교 운동장과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차 가능한 학교와 개방시간 등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알림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교 주차 시설 이용을 원하면 사전에 해당 학교에 확인하고 문의사항도 학교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한용수 기자 hys@

### 서울시 대시민 업무보고 개최

시민·외부 전문가 80여명 초청

서울시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왔던 신년 업무 보고를 처음으로 시민에게 공개했다.

서울시는 22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대시민 업무보고’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실·본부·국장, 관계 투자·출연기관장과 정책관계자에 대한 공모·초청을 통해 사전에 선정된 시민·외부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했다.

박원순 시장은 “신년 업무보고는 가장 치열하고 첨예하게 한해 농사를 고민하는 시간이며 내부적으로만 진행했는데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제시정 철학에 맞게 시민과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했다”는 인사말로 보고를 시작했다.

새해 업무 보고는 서울시의 한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는 내부 검토 과정이다. 서울시 관계



‘2020년 대시민 업무보고’ 현장 모습.

/서울시

자는 “업무 공정성 침해나 이해관계자 반발 등 사업 추진상 어려움을 이유로 신년 업무 보고를 통상 비공개로 진행해왔다”며 “이 때문에 외부의 시각으로 보는 객관적 평가가 미흡하고 정책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혁신창업 활성화 ▲청년출발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초등돌봄 키움센터 설치 등 올해 시가 추진할 4대 역점사업 내용을 각

분야 간부들이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외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답게 각계 전문가들의 비판적 제언이 나왔다.

혁신창업 지원과 관련해 한양대 최경철 교수는 “서울시 정책과 대학·민간의 서비스에 중복되는 부분이 꽤 있다. 궁극적으로 초기 지원체계는 민간에 이양하고 규제 완화 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정 기자 hjk1@

## 서울시, ‘빈차’ 잘 보이게 ‘택시표시등’ 개선

서울시가 택시 표시등을 3배로 키워 빈차·예약 여부 시인성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택시 200대를 대상으로 택시 표시등 개선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택시 지붕 위에 달린 외부 표시등(갓등)의 크기를 3배로 늘려 빈차와 예약 차량의 구분을 쉽게 하고, 미세먼지 등 각종 생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택시 표시등 크기는 정면을 기준으로 가로는 40cm에서 36cm로 소폭 줄고, 세로는 14cm에서 46cm로 3배가량 커진다.



늘어난 부분에는 LED 등을 설치해 ‘빈차’, ‘예약’, ‘휴무’ 여부를 표시한다.

기준에 ‘빈차’나 ‘예약’ 여부를 표시하던 택시 내부 표시등은 외부 표시등으로 통합된다. 외부 표시등 측면 길이도 25cm에서 122cm로 5배 가까이 늘어난다. 측면에는 LCD 패널과 각종 센서가 달린다.

/김현정 기자

##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3 | 해질 / 17:45

1월 23일(목) 음력 : 12월 29일

수도권 날씨 2~1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경기도 485억 투입해 어린이 교통사고 막는다

경기도가 올해 교통사고 걱정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국비 254억 원을 포함, 총 485억 원을 들여 ‘2020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관련 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어린이보

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등 각종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히 지난 12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관련사업 예산을 더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이유로 도는 올해 당초 계획됐던 예산 53억

원보다 198억 원이 더 늘어난 총 25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 254억 원과 시군비 231억 원을 포함해 총 485억 원의 사업비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 금지 표시를 강화함은 물론, 무인교통단속장비 193곳, 신호등 399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중으로, 사업비 배분은 초등학교수, 단속장비 설치비용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